

주요 대학, 등록금 인상 저울질 “5%대 논의” vs “올해는 동결”

〈사립대〉

〈국립대〉

십수년간 동결로 재정 압박
수도권 대학 중심 인상 움직임
국총협 “정부 재정지원 요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거점국립대학총장 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9개 지방 소재 국립대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에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난으로 인상을 강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10일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총협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데 이은 결정이다.

국총협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교육의 질을 고려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내국인 학부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법정한도인 5.49% 인상하는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와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과 23일 추가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연세대도 등록금 5.49% 인상하는안을 학생회에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십수년간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은 135.9%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의 동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고,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유치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으로, 이중 국립대학 평균은 427만원, 사립대학은 763

만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가 당장의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한 입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국립대 인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일 뿐”이라며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편차가 벌어졌음에도 수도권 대학 대한 열망을 뒤집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시에서 이미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소재 41개 대학에는 총 19만4169명이 지원해, 전년(18만9005명)보다 5164명(2.7%)이 증가한 반면, 지방 소재 119곳의 지원자 수는 20만3188명으로 전년(20만6781명) 대비 3593명(1.7%)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더해 수능마져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동점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으로 정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그러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선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현재, 주중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심리

尹, 첫 변론기간 불출석 예정

영장 집행시도 등 신변안전 우려
윤갑근 변호사 “경호문제 해결돼야”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 차벽과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현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현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